

성명서

- 일본의 전후배상책임에 관하여 -

이제 백년이면 해방 50주년이다. 반세기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슬픔과 고통을 간직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 종로들이 너무도 많다. 일본군은 괴하여 '사상' 당하여 노예와 같은 생활을 강요 당하였던 군위안부출신 할머니들, 강제징용자, 일족피로자, 강제징동포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전후 일본의 무상화와 자신의 조국인 한국정부의 무관심에 내몰려 처진 상태로 오늘날까지 인고의 생활을 견디어 왔다.

일본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전지역에서 일본의 전후책임 논의가 활발되고 국제적 바람이 창대하자 일본정부는 희생자가인의 배상책임 대신에 아시아포로기금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강행으로 과거의 범죄적 인권유린에 대한 반성의 성과를 갖고 있다면 개인적 배상을 대안으로 내놓기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문화전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교육기금이 일본의 과거의 범죄수반으로 될수 있을 것이다. 동경독동국제문사재판부나 다보스포럼 전범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은 전범조차 훈장과 면호의 혜택을 받고 있는 마당에 미만에 의하여 저질러진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와 피해자들이 아무런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는 이같은 일본정부의 우회처리를 태도와 더불어 우리정부의 무관심과 무성의에도 한마디 말할수가 있을 수 없다.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일본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민적 태상의 형구는 알겠다고 언명하고 고대신 진상조사, 사죄 등의 전후처리를 확고히 할 것을 요구했던 것은 우리의 사실이다. 그러나 공민적 태상임을 확립한 사회방법이 어디에 있었는지. 뿐만아니라 우리정부는 일본정부를에게 제대로 진상조사를 하도록 요구를 한적이 있는 지 의문스럽다. 더구나 희생자인 군위안부출신 할머니들을 비롯하여 식민지시대의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도 대단히 유감스럽다. 공정배상도 받지 않겠다고 허언하고 이 엄청난 피해자들을 돌보지도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일본정부가 적어도 이 종살한 피해자들을 돌보지도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일본정부가 적어도 이 종살한 피해자들을 돌보지도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일본정부가 적어도 이 종살한 피해자들을 돌보지도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일본정부가 적어도 이 종살한 피해자들을 돌보지도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제 전후기을 맞이하면서 이 모든 일항의 중점을 고쳐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민간 인권위원회 '현대노예적실무반(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와 '아시아고성생존자재단'에의 종자권고할 국제연합 인권위원회 소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채택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가 위 권고한 받아들이야 할라고 본다. 지금 요구하건다. 일본정부는 보다 광범위하고 정의로운 일장에서 일본이 과거에 저지를 죄악을 정하여 반성하고 그 반성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개인배상과 가해자처벌, 고려사건들 등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유엔수정 통과한 교육기금의 설치만으로 그 죄악이 사화되고, 아시아인의 원한과 복수가 있어 질 수는 없는 것이다.

제정당부를 맞는 일본정부는 이웃나라에 저지른 전쟁범죄를 자국이 해소할 것을 요구한다.

1994. 8.

대한 변호사 협회 협회장 이 세 중